

梁 承 根 議員

“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동구 제3선거구

동구 제3선거구 양 승 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성호 시장님과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교통과 주거복지 그리고 교육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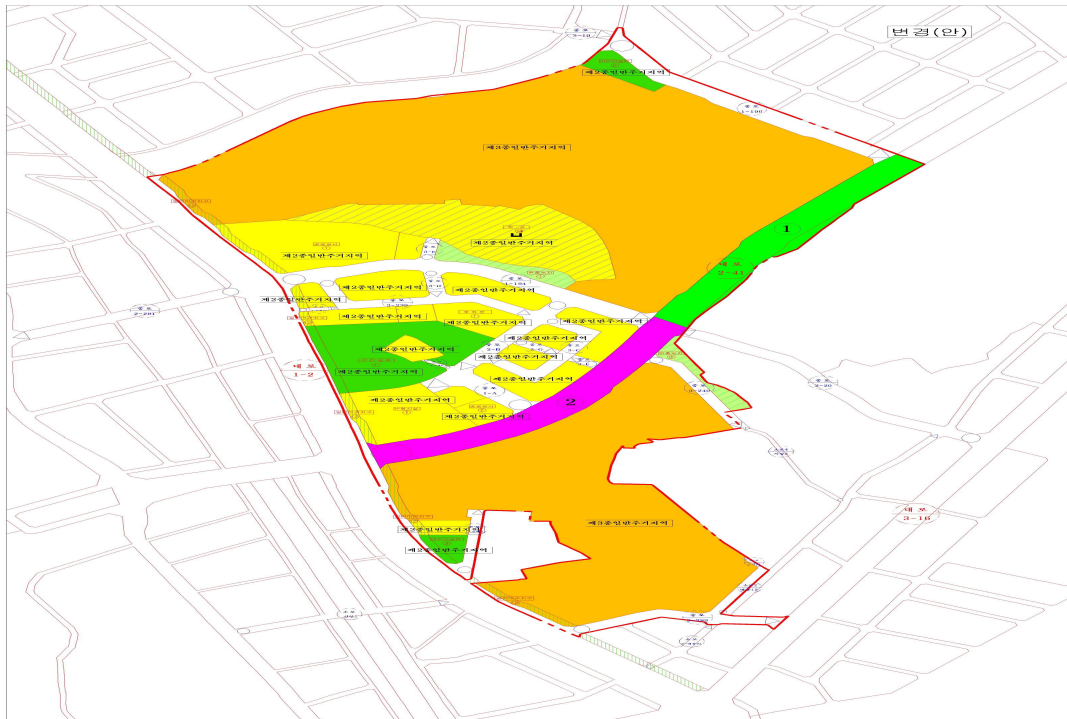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 6월,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곳(11.72km²)의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상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94곳으로 46.5%라고는 하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고시 이후,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전시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실제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소제동, 가양1동 지역 2천 3백여 가구 35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구역을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추진이 상당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공급이나 건축물 신·개축의 제한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제구역 일대는 주민들의 이주로 인한 공가(空家)가 많이 발생하여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대규모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와 동구청을 방문하여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해 보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니,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旧 주택공사)나 동구청에 떠미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이런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분쟁,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위치도)

당시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사업시행 협약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동부선 연결도로 1,169m중 사업구역 내 716m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사업구역 외 453m는 대전시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구역 외 도로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지구 사업구역 내 도로는 착공은커녕 편입용지 보상도 안 된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제구역 현장전경)

따라서 가양동, 소제동 동부선 연결도로 편입용지 소유자들은 지난 10월에 시장님께 소제구역 사업지구 내에서 도로 편입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토지 제척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가양동, 소제동 구역은 현재 도시가스공급은 물론 건축물 신·개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사업비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가 상승을 부추 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재정착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부선 연결도로(대로2-41호선)’ 건설이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동부선 연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업구역 내 716m 연결도로가 조속히 건설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동부선 연결도로가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에서 개설해 놓은 453m 도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 투입된 217억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서관통도로의 동광장 주변은 매일 출퇴근시간이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도 감독해야 할 대전시와 동구청에서 조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전 구간 (B=30m, L=716m)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995년도에 수립했고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1, 2호선이 승인되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호선만 승인되고 2호선은 취소되었습니다. 2호선이 취소된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의 비용·편익비 (B/C, Cost Benefit Ratio : 경제적 효율성)가 기준치인 1.0 보다 적은 0.73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검토를 할 때 B/C에 대해서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1.0이 넘는지를 확인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립 당시 B/C 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했거나 아니면 용역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순환형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B/C가 1.42로 승인되어 현재는 노선을 추가 보완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B/C가 나온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철도 2호선은 관저동에서 시작해서 서대전 4가, 대동 5거리, 가양4가, 중리 4거리, 유성을 거쳐 관저동으로 가는 순환형 노선이었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구, 중구, 대덕구의 구도심 주민들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적인 소외감과 자기 권리마저 빼앗겼다고 분개하면서 당초 노선인 순환형이 반드시 추진되어 구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4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2호선 계획안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노선을 검토할 때 동구, 중구, 대덕구의 구도심을 통과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한을 풀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호남선 철도에 여유 노선이 발생하니까, 호남선 국철을 활용해서 충북선과 경부선을 함께 이용해서 충청권광역전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선로용량이 부족한 경부선, 조치원~대전 구간을 증설하여 계룡시 - 대전 - 세종 - 오송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시의 계획대로 충청권광역전철망이 구축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좀 더 있다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서 미뤄지거나 소홀히 다뤄 질 수 있다고 잘 못 판단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대전 통과 구간은 X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선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충청권광역전철망과 별개로 도시철도 2호선을 반드시 순환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명품도시 대전이 되기를 희망하며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와 교육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교육기회,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 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학생들은 대전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든 같은 교육환경에서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으며, 똑같이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모든 시민들은 학부모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대전의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대전 교육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발상지였던 원도심의 많은 인프라가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일방적인 신도심 위주의 성장정책은 과거 명문이었던 동부 지역의 학교를 기피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대전을 동·서로 갈라놓았습니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유입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국감 시 밝혀진 전국 고등학교 수능 성적 공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대전 지역 동·서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수능성적 순위를 살펴보면 서구가 7위, 유성구가 34위인 반면에 중구는 65위, 동구는 91위, 대덕구는 1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표 1>).

<표 1>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수능성적 순위 및
지역 내 최상위 학교(특목고 제외)

전국 순위	지역	2005학년	2006학년	2007학년	2009학년
7	서구	충남고	충남고	충남고	충남고
	313.7	330.8	332.6	330.4	329.1
34	유성구	대덕고	대덕고	대덕고	대덕고
	298.4	345.1	339.4	338.1	341.5
65	중구	충남여	대전중앙	충남여	충남여
	291.2	315.4	311.7	309.1	310.0
91	동구	보문	보문	보문	보문
	284.1	312.7	315.2	311.6	314.4
133	대덕구	대전송촌	대전송촌	대전송촌	대전송촌
	274.1	295.4	289.3	291.7	297.0

주1) 기초자치단체 이름 아래 숫자는 5년간 3개 영역 표준점수 평균 합산(특목고 포함)

주2) 지역 내 최상위 학교 이름 아래 숫자는 각 해당 연도 3개 영역 표준점수 평균 합산

또한 지난 3년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와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중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서구와 유성구의 학생에 비해 원도심권인 동구, 중구, 대덕구 학생이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생 수 차이가 10분의 1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표 2>, <표 3>).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격차의 문제를 교육기관만의 문제라고 떠넘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동부지역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학력신장,

교육환경 평가·시설개선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 학교 운영·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운영 등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서간의 교육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떠나고, 많은 학생들은 동부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표 2>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각 구별 입학생수 현황(명, %)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기타	합계	비고
2007년	12(4)	29(9)	144(41)	81(24)	29(9)	44(13)	339(100)	-
2008년	16(5)	36(11)	158(46)	73(21)	36(11)	22(6)	341(100)	-
2009년	15(4)	28(8)	154(46)	87(26)	25(7)	30(9)	339(100)	-
지역별 입학생수/ 전체입학생수[A]	4.0%	9.0%	45.0%	24.0%	9.0%	9.0%	100.0	2009 년도
지역중학생수/ 대전전체중학생수[B]	12.0%	15.2%	39.3%	18.2%	15.3%	-	100.0	
전체중학생수 대비 입학율 차이[A-B]	-8%	-6.2%	+5.7%	+5.8%	-6.3%	+9%	-	

<표 3> 대전과학고등학교 각 구별 입학생수 현황(명, %)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기타	합계	비고
2007년	3(4.1)	3(4.1)	34(46.6)	29(39.7)	4(5.5)	0(0)	73	-
2008년	0(0)	4(5.5)	31(43.1)	29(40.3)	5(6.9)	3(4.2)	72	-
2009년	2(2.7)	4(5.5)	40(54.8)	24(32.9)	3(4.1)	0(0)	73	-
지역별 입학생수/ 전체입학생수[A]	2.3%	5.0%	48.2%	37.6%	5.5%	1.4%	100.0	2009 년도
지역중학생수/ 대전전체중학생수[B]	12.0%	15.2%	39.3%	18.2%	15.3%	-	100.0	
전체중학생수 대비 입학율 차이[A-B]	-9.7%	-10.2%	+8.9%	+19.4%	-9.8%	+1.4%	-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교육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인프라 즉, 학교주변 환경개선, 인구유입효과를 노릴 수 있는 복지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교통문제 등에 대해 대전시의 투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교육재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예산액 대비 비법정전입금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0.27%로 분석되었습니다(<표 4>).

<표 4> 2009년도 7대광역시 비법정 이전수입 현황(단위 : 천원, %)

교육청명	2009년 예산액(A) (’09. 11. 19 기준)	비법정 이전수입(B)	예산액 대비 비율(B/A)
서울	6,897,445,280	100,464,123	1.46%
부산	2,716,627,154	25,700,301	0.95%
대구	2,158,534,826	11,568,780	0.54%
인천	2,220,348,886	13,304,620	0.60%
대전	1,338,907,274	3,638,885	0.27%
광주	1,439,774,008	3,881,858	0.27%
울산	1,099,095,521	6,674,000	0.61%

아울러 교육청 예산 편성비율을 보면 2009년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총액 대비 29.2%로 교육청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교육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표 5>).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교육청의 많은 비법정전입금 확보입니다만 올해의 경우 비법정전입금이 전년대비 5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대전시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표 6>).

<표 5> 대전시교육청 사업비 편성내용(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액(천원)	비율(%)	예산액(천원)	비율(%)
예산총액		1,296,510,323	100.0	1,342,304,274	100.0
사업비	교육사업비	145,218,160	11.2	171,191,314	12.8
	학교시설사업비	162,113,951	12.5	217,122,043	16.2
	기타시설사업비	2,853,156	0.2	2,901,875	0.2
	계	310,185,267	23.9	391,215,232	29.2

<표 6> 교육청의 법정·비법정전입금 현황(단위 : 천원)

구분	법정전입금액	비법정전입금액
2006년	185,818,941	211,516
2007년	194,186,349	532,514
2008년	194,619,082	6,336,150
2009년	179,446,527	3,638,885

시장님께서서는 교육은 지원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미래의 동량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교육 명품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인재에 달려있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교육에 달렸으며, 교육의 성과는 학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